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봄철 산불예방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봄철 산불예방수칙 준수 도민 호소

전국 동시다발 발생 국가위기경보 ‘심각’ 격상 따른 호소문 발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봄철 산불 예방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 푸른 전남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농폐기물·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도민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 22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휴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임산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산에서 연기나 불을 발견하면 119, 112, 관할 산림부서에 신속히 신고하고, 산불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행 중 산불이 발생하면 골짜기를 피해 바람 반대 방향으로 즉시 하산할 것을 당부했다.

올 들어 전남에선 2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대부분 불법 소각,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다.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해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협조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봄철을 맞아 지역 축제와 행사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한식과 청명절을 맞아 입산과 성묘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

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산불 감시 사각지역을 줄이고 야간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전남산애(山愛) 감시원’ 696명과 야간 ‘신속대응반’ 28개조, 179명을 편성해 밤 10시까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산불 진화헬기 13대, 진화인력 1천180명, 진화장비 5만 4천 점, 드론 38대, 감시영상시스템 운영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소방·경찰·군인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전남대 의대생 복학 저조… “대규모 제적 현실로 닥친다”

휴학생 593명 중 마감일까지 복학 신청은 소수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 조선대도 복귀 미지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저조, 대규모 제적(학적 말소) 우려가 점차 현실되고 있다.

25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현재 의대 휴학생 593명 중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최종 마감일인 전날까지 30여 명만이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대학 측은 휴학생을 반려했으나 복학 신청하지 않은 휴학생들에게는 ‘미복학 제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전 통보까지 마쳤다.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일로부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열흘 가량이 지나면 해당 학생들은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로 전남대 의대 재학생 650여 명이 동맹 휴학에 돌입했고, 군 입대 등 사유가 인정된 일부만이 휴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학 측은 늦어도 법정 수업일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오는 28일까지는 복학을 신청하면 제적은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의실로 돌아올 학생

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주 중 1학기 최종 등록을 마감하는 조선대 의대의 경우, 제적 학생 878명 중 689명이 현재 휴학 상태다. 1학기 등록 인원은 신입생을 비롯해 총 189명에 불과하다. 전체 제적 학생의 20%대를 간신히 넘겼다.

정부와 대학 측이 정한 ‘데드라인’이 지난 다음 달이면 지역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 대규모 제적 우려가 현실화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정부와 각 대학들은 올 1학기부터는 학사 유연화 등 특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복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더는 대규모 학사 유연화를 하기는 어렵다. 미등록 제적 통보 학생에 대한 별도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대학마다 학칙에 따라 조치된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한편, 전일까지 복학 시한을 마감한 고려대·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절반 안팎의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온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광훈 기자

광주 186개 시민단체 “헌재, 국민 배신 말고尹 신속 파면”

광주 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체 없는 파면을 촉구했다.

지역 18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광주 동구 광주법원·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3 비상 계엄 이후 100일이 훌쩍 지났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내란 수괴의 파면을 위한 기일 지정 소식조차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목숨 걸고 계엄군 장갑차를 막아내고, 눈사람이 돼 한겨울 칼바람을 견뎌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은 겨

울을 지나 봄이 됐지만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은 배신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랐던 정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유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법치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 무너진 헌정 질서 회복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며 “불법 계엄이 야기한 내란 사태로 이미 수십 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 배신의 길을 걸지 말아야 한다. 지체 없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